우리에게 유능한 정치가 있는가

데스크칼럼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seonwook.kim@jnilbo.com

요즘 서민 경제에는 암울한 소식뿐이다. '난방비 폭탄'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큰 폭의 전기료 인상에 이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대기중이다.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주차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됐다. 생필품 가격 인상도 이어졌다.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안 오른게 없다. 외식 물가도 치솟았다. 지난해 연간 외식물가 평균 상승률은 7.7%였다. 1992년 10.3%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하반기 부터는 안정된다"고 성난 민심을 다독였다. 과연 믿을수 있는 말인가.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등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다. 작년 4분기, 수출과 소비가 꺾이고 투자마저 부진해 '트리플 한파'가 몰아쳤다. 수출은 코로나19때를 제외하면 37년 만에 최악이다. 작년 연간 무역적자는 475억 달러(약60조원)로 사상 최대였다. 14년만에 적자로 한해를 마감했다. 새해에는 더 큰 한파가 닥쳤다. 1월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 126억9000만달러(15조 6000억원)를 기록했다. 11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수출 악화-벌어들이는 달러 부족(외환보유고 감소 위기)-재고 증가-기업 투자 위축의 악순환이다. 그래도, 정부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누가 봐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정부 판단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 싶다.

'제2의 IMF'라는 경고등이 우리 앞에 켜졌다. 그런데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 헤쳐 나아가야할 정치는 실종됐다. 여전히 지난 대선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로 다시 만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극한 대결 시즌2가 정국을 집어 삼키는 형국이다. 협치는 사라졌고, 대치 전선만 굳어졌다. 우리의 최대 위기는 경제 보다는 정치 위기, 정당 위기 같다. 도대체 정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집권여당의 정치는 괴이해 보이기 까지한다. 야권에선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아냥댄다. 이준석 전 당 대표, '내부 총질하던' 대표 몰아내기, 나경원 전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 친윤계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 맹폭. 윤석열 대통령의 과한 '당무 개입'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이 의중을 흘리면 친윤계 당 지도부가 나서 전당대회 규칙도 바꾸고, '당권 의중'에 반한 자는 찍어 내린다. 새내기 초선 의원들도 덩달아 춤춘다. 이른바 '연판장 돌리기' 정치로 나 전 의원의 '전당행'을 좌절시켰다. 권력자의 내년 총선 공천 줄세우기 인지, 그들이 알아서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인지, 기괴한 광경이다. 과거 보수정당의 역동성은 어디로 갔는가.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오는 3월 '친윤 당권'이 구축될 때까지 '반윤 낙인 찍기'는 진행형이 될 것 같다.

원내 제1 야당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 검사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전국의 당원들이 한데 모였다.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여권에선 민심에 눈과 귀를 닫은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장에서 민심을 듣겠다며 이 대표 주도로 경청 투어를 해왔다.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서민들의 아우성을 들었을 텐데, 선택은 '국민 속으로'가 아닌 '여의도 밖으로'였다. 개헌만 빼고 원하면 뭐든 처리할수 있는 과반 의석(169석)의 다수당이 장외투쟁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했다. 이게 '민주당의 길'인지,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과반 의석을 줬는데도 거리로 나가면, 내년 총선에서는 몇 석을 더 달라고 해야하는지 묻고 싶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상대책위 체제인 여당 보다 낮거나 엇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를 곱씹어 봤으면 한다.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은 '윤심'을 놓고 서로 뜯고 싸우고, 제1야당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대여 투쟁을 위해 여의도를 뛰쳐 나왔다. 여당은 대통령이란 이름의, 제1야당은 당 대표라는 이름의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꼴이다. 미래와 희망이 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씁쓸하다. 이러니 우리 앞에 닥친 대내외적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부의 말만 믿고 안심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살을 에는 '공공요금 발' 고물가와 고금리의 칼바람이 너무 매섭다. 불확실성의 경제 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유능한 정치, 건강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인가 싶다.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시린 겨울이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농촌 도둑전기 논란

계묘년 새해 벽두 최대 화두는 급등한 난방비였다. 지난해 12월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담긴 도시가스 요금 부과액을 보고 많은 지역민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눈치다. 예년 겨울철에 비해 2~3배 정도 증액됐기 때문이다. '난방비 폭탄'에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와 정치권은 부랴부랴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는 등 부산을 떨었다. 이런 와중에 구례군 농촌마을에서 '도둑 전기 사용 논란'이 빚어졌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소형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은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례에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200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해 농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한전의 이번 단속은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도정하지 않은 상태인 벼와 밭에서 수확한 배추와 콩은 보관 가능하고, 정미한 쌀과 김치와 두부와 메주 등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다.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저온 창고 가동용 전기 사용 요금은 농사용 전력으로 분류돼 일반용에 비해 2배 이상 싼편이다. 농민들은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집안의 냉장고 보다는 저온 창고 보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한데 현재 전국에는 13만 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숫자가 많아 한전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전기사용에 대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방치할 경우 도둑 전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손실규모가 크게 늘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의 저온 보관시설 단속은 지난해 126건, 위약금 5억 9600만원 부과로 전년인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최대 30조원으로 추정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입장은 이해 못할 바 아니나 개선해야 할 점은 있어 보인다. 지역민 반발이 확산하자 한전은 지난달 29일 농사용 전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약금 부과 논란은 한전의 규정이 애매한 데서 비롯된 점이 큰 만큼,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함으로써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국토균형발전과 농촌소멸 위기 대책 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소형농작물 저온보관창고는 이제 농촌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인 현실을 인정해 전기요금을 싸게 부과해 농촌살이의 이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살이에 비해 전기요금은 적게 부담한다는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기수 논설실장

社 說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올해는 물꼬 터야

2008년부터 15년째 '난항'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왔던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이 15년째 표류중이다. 지난 2017년 광주 용산동으로 부지가 결정됐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느라 이전 계획은 밑그림조차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 동부경찰서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특구로 지정한 지역이다. 이대로라면 동부서를 옮겨 문화도시 조성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문체부의 구상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대상 부지의 70%를 넘게 소유한 토지 소유자가 경찰이 제출한 설계안을 거부하면서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동부서 이전은 지난 2008년 시작된 뒤 2017년 광주 동구 용산동으로 부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공·사익을 비교했을 때 토지소유주의 억울함이 인정된다'며 동구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82년 광주 대의동에 개설된 동부경찰서는 동구의 치안을 관할하는 동구의 얼굴이다. 하지만 이곳은 도심 속 경찰서 답게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공간 등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직원들 역시 비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전에 필요한 390억여 원의 정부 예산이 이미 확보 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동부서 이전이 지연되는 것은 누구도 웃지 못하는 공동 패자로 가는 길인 셈이다.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특구인 지금의 동부서는 문화도시 조성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시민이 바라는 것도 이미 결정된 이전 계획을 하루빨리 추진해 광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관계기관 모두가 광주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합일점을 찾아 올해는 이전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렇다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일방적인 피해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과 광주시, 토지 소유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문화특구에 걸맞은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튀르키예·시리아에 국제연대 구호 절실

전남도·광주 북구 지원 나서

튀르키예(옛 터키)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 후 나흘째인 9일(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광범위한 데 비해 구조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희생자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AFP·로이터·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1만2391명, 시리아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피해 지역에 구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이 독자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파견한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도 어제 튀르키예 현지에 도착해 구조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빨리 유엔의 파병 요청에 응한 우리와는 형제와도 같은 나라다. 전쟁 기간 튀르키예 젊은이 1만 5000여 명(연인원)이 참전해 1000명 정도 전사했다. 재난에 처한 형제국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제적 지원이 튀르키예에 집중되고 있는 듯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많은 나라들과 우호관계에 있기 때문인 반면 시리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등 고립돼 있어서다. 특히 시리아는 12년 넘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차에 강진 피해까지 겪게 돼 국제사회의 구호의 손길이 우려된다.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전남도가 이날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1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광주 북구도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발벗고 나서 돕는 것이 인류애의 발휘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고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는 것일 것이다. 많은 사람의 연대의 손길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